

김성태 “靑－여야 개헌 회동하자”



가까이 하기엔 먼 與野 4일 서울시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4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방송법 개정 vs 공수처법 줄다리기…국회 파행 네 탓 공방

여야의 개헌 공방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있지만 여야의 이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어 국회 차원의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국회 차원의 협상 대신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개헌 문제를 담판 지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선이 자칫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개헌안 발의 후 국회 차원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청와대가 당장 논의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축했지만, 협상이 막판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당정이 모종의 결단을 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을 함께하며 개헌 문제를 포함해 4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개헌 협상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 원원식 원내대표는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요구하고, 이에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로 맞불을 놓으면서 임시국회 정상화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개헌 문제 및 국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거센 공중전을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고질병 수준”이라면서 한국당 개헌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각제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

권의 원칙에 위배되고 삼권 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관계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금지법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농성을 마다치 않던 민주당 의원 116명은 다 어디 계시냐”며 “정권을 잡았다고 소신마저 내팽개친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며 방송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그간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대하면서요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않아 국민 앞에 부끄러웠는데 제1야당이 이제라도 밥값을 해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당론이라며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면서 양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화와 정의, 선거연대도 가능할까

평화당 “자연스러운 연대 가능”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정책연대를 넘어 6·13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공조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양당은 그동안 선거연대 가능성을 일축해 왔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등 적극적인 선거연대는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보군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양당이 단일 후보를 내거나, 보수야당 후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형태의 연대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OBS에 출연,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이미 출마에 뜻을 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정의당과) 경합이 되는 것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나 “후보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로 자연스럽게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우리 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어떤 당은 후보를 내고 어떤 당은 후보를 못 내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곳에서는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측은 평화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 내의 연합 정치를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요청 등에 따라 후보 간에 연대를 하는 것은 중앙당이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전남도지사 후보

이용섭 ‘장애인과 동행’ 6대 공약 발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4일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광주 만들기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광주장애인직업교육원’을 신설해 장애 수준별 교육훈련부터 맞춤형 일자리까지 연결해주는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공모사업이나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광주형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20%인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2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복구에만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 전용목욕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 생활편의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여수박람회장, 20 빅3 해양파크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4일 “여수박람회장의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일본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 홍콩 오션파크를 연결하는 아시아 빅3 해양 테마파크로 조성해 남도 관광 1억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여수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정부투자비 3800억원 상환문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현재 남아있는 여수엑스포장 52만㎡를 무상양여 받고, 친수공간 60만㎡를 포함해 112만㎡ 규모에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남도 관광 1억명 시대를 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만재, 담양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문



장만재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4일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곁애남(95) 할머니를 찾아가 위로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제 나라의 백성도 지키지 못한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며 “이러한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지난 보수정권에서 위안부 문제를 눈감고 있는 동안 연로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매우 안타깝다”며 “지도자는 국민을 지키려는 강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박혜자 “박근혜 재판거부, 후안무치 결정체”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법치였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본인이 가장 강조했던 법치를 거부하고 여섯 달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의무를 저버리고 한 때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품격조차도 내팽개친 후안무치의 결정체이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국정농단의 책임과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거부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야당, 4월 임시국회 복귀해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4월 임시국회가 파행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동까지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국민의 권리 회복과 국가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4월 각 당의 원내대표가 비공개 조찬회동을 열고 4월 국회 정상화와 개헌안 합의 등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을 했다”면서 “이는 여야가 제시한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었으며 앞으로도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진 “서구에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



김명진 민주평화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 타운 내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고, 2021년에 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는데 발주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회 도서관은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으로 방대한 책과 각종 기록물이 보관돼 있어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권이 확대되고 광주의 문화위상은 높아지며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도서관 분관에 청소년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특기 강좌를 개설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

헌정특위 다음주 재가동…각 당 자체 개헌안 제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다음주부터 재가동된다.

특히 각 당이 이번 주까지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해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해 온 헌정특위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재가동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방송법 처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되고 있지만, 국민적 요구에 따라 헌정특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금요일(6일)까지 헌정특위에 각 당의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각 당은 다음주 월요일(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제출돼야 헌정특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우리의 개헌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지난 2월 개헌 의총을 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민주당의 개헌안이) 대통령 개헌안으로 충분히 반영됐다. 특별히 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안까지 모두 제출받아 다음주 월요일부터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